

#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사항 비교

보도일시 : 2018.10.30.(화)

연 번	항 목		현 행	개정안
1	법의 목적		‘근로자’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·증진	‘근로자’+‘일하는사람’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·증진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배달종사자포함
2	재해예방 시스템		사업장 단위	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 -(대표이사)기업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→이사회 보고→승인
3	도급인 책임	안전/보건조치 의무	일부 위험한 장소	사업장 전체로 확대
4		위반 시 처벌수준	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,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5		건설현장 안전/보건조치	-	기계·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부담 규정 신설
6	도급 허용 범위		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 사용하는 작업 에 대한 도급 금지	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 사용하는 작업 에 대한 도급 금지하되, -일시·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은 예외적으로 허용
7	화학물질 제조·수입하는 자에 대한 의무		-	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의무
8	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알권리		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 단하여 자료 비공개	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받는 경 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 업비밀로 인정
9	형사적 제재	사업주	근로자 사망시, 7년 이하의 징역	근로자 사망시, 10년 이하의 징역
10		법인 사업주	근로자 사망시, 1억원 이하 벌금	근로자 사망시, 10억원 이하 벌금
11		기타	-	법원에서 유죄 선고 시,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 의무 수강

- 정부는 28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루어져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「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」을 심의·의결함.
-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,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 밝힘.